

참교육학부모회 회장 이윤경

참교육학부모회 회장 이윤경입니다. 저는 고등학생과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저는 초중고 학부모들에게 학교 교육 참여를 독려하며 학부모 교육을 하고 다닙니다. 학부모는 수십 년간 우리나라 교육에서 많은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육성회비를 없앴고, 운영지원비도 없앴고,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일궈냈습니다. 하지만 영유아는 여전히 공립인지 사립인지에 따라, 어린이집인지 유치원인지에 따라 차별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당연하게 여겨왔습니다.

왜 영유아 부모들은 목소리를 내지 않는 걸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각자도생 육아에 벅차서 목소리를 낼 여건이 안 되고, 둘째, 영유아기는 교육이 아닌 돌봄이라고 생각해 교육정책 수립과 논의 대상에서 아예 배제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지난 달에 경기도의 한 교육지원청에서 유치원 운영위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유보통합이라는 말을 들어봤는지 물어봤더니 잘 모르더라고요. 일반 학부모도 아니고 운영위원들인데도요. 왜 그럴까요?

첫째, 유치원 학부모는 어린이집을 모르고, 어린이집 학부모는 유치원을 모릅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뉘어져 있는 것도 모르고 어떤 불평등을 겪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유치원에 보내다가 어린이집으로 옮겨 본 경우에만 비교가 가능하고 어떤 차별이 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유보통합에 대해서 홍보를 안 합니다. 유보통합은 국정과제인데 다른 정책과 달리 당사자인 영유아 부모들에게도 홍보를 안 합니다. 왜 학부모들에게 설문조사 한 번 하지 않는 걸까요? 대입 설명회는 있는데 왜 유보통합 설명회는 없는 걸까요?

그 이유는 책임지는 부서가 없어서입니다. 유보통합 관련 담당자가 없고 내 업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면서 그렇게 영유아를 방치했던 기간이 무려 30년입니다.

유보통합 논의에 당사자 목소리가 배제된 이유에는 교육부와 교육청 탓도 큼니다.

영유아기는 교육이 아닌 보육이고, 영유아기보다 초·중·고·대학 교육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교육당국에 뿌리 깊이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에 유아교육과가 별도로 있는 곳도 찾기 힘듭니다. 그러니 “영유아가 형님들이 써야 할 돈을 강탈한다”는 말이 부끄럼 없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이면 어린이집 부모들이 나서서 세금납부 거부 운동을 해야 할 판입니다. 내가 낸 세금이 교육청에 교부금으로 들어가는데 그 돈은 남의 아이들한테만 쓰인다는 걸 알면 어느 부모가 세금을 내겠습니까? 영유아 부모가 아닌 국민들이 생각해도 납득하기 어렵고 참 속 좁은 생각입니다. 대학에도 빼앗기고 어린이집에도 빼앗긴다는 식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영유아 교육은 대학의 재정을 별도로 확보해 지원하라는 것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대학생 부모들도 대학 재정은 별도여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영유아에 대해서는 세금으로 차별 없이

지원해야 할 ‘모두가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보통합 때문에 초중고 교육재정이 파탄난다는 말에 국민들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모두 유보통합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국민들은 이를 철썩같이 믿고 있습니다. 입장이 달랐던 공약들은 여당, 야당이 합의하지 못할 수 있지만 유보통합만큼은 실현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교육부로 통합된 게 아니냐고 하는 국민들도 많습니다. 아직 통합이 안 됐다고 하면 “양쪽 다 공약이었는데 설마 안 되겠어?”라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이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 첫 관문인 ‘정부조직법 개정’부터 순탄치가 않습니다. 유보통합에 반대하는 건 아니라고 하는 일부 세력들이 보건복지부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것부터 막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시기상조라고 하면서, 그 준비를 하기 위한 부처 통합마저 반대하는 건 스스로도 모순이라는 걸 잘 알 겁니다.

국회의원들에게 촉구합니다. 이해 관계가 아닌 영유아의 권익만 생각해 주세요. 이제라도 당사자인 부모들의 얘기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정당 간에 싸울 일도 아닙니다. 공약을 믿고 투표한 국민들에게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내년이 총선입니다. 전국의 유권자들이 지켜보겠습니다.